

제426회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임시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6월10일(화)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2.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5)
3.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5)
4.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7)
5.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98)
6. 업무현황보고
 - 가. 기획재정부
 - 나. 행정안전부
 - 다. 농림축산식품부
 - 라. 중소벤처기업부
 - 마. 소방청
 - 바. 국가유산청
 - 사. 산림청

상정된 안건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4
2.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5) 5
3.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5) 5
4.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7) 5
5.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98) 5
6. 업무현황보고 5
 - 가. 기획재정부

나. 행정안전부
다. 농림축산식품부
라. 중소벤처기업부
마. 소방청
바. 국가유산청
사. 산림청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정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원회 구성 및 우리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심사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7개 기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겠습니다.

안전 심사 방식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법률안과 업무현황 보고를 일괄 상정하고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해당 기관의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전체 안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병합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기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장관이 공식으로 관련 차관 및 실장이 각각 참석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관이 국무회의 참석 등을 이유로 위원장과 간사 간의 양해하에 차관이 참석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 예정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이번 회의에 처음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제가 처음 참석했군요.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위원입니다.

대전 대덕구가 지역구고요.

이번 경북 산불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산불대책 어떻게 세워야 될지 반면교사로 잘 삼았으면 좋겠고요. 이번 특위에서 근본적인 전환에 대한 대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다음은 국민의힘 서천호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호 위원 반갑습니다.

경남 사천·남해·하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서천호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 산불 피해가 여러 차례 언론보도를 통해서 주지돼 있습니다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피해를 입었고 또 그 후폭풍으로 피해 농가 또 피해 국민들께서 아직까지도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특위를 통해서 피해 구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산불 예방을 위한 제도, 법적인 부분들까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다음은 신성범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범 위원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의 신성범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참석하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지역구인 경남 산청이 사실은 영남 지역에서 산불이 처음 일어난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임상섭 산림청장이 와 주시고 고생하셨는데, 주민들 공무원들 또 군·경찰 소방 관계자분들과 열흘 넘게 함께하면서 보고 듣고 느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 특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 급한 건 알지만 조금은 장기적이고 이런 대책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호 다음은 이만희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유례 없는 재난에 직면한 현장에서 그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하고 지혜를 모아서 신속한 피해 복구는 물론이고 항구적인, 그런 재난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 제도라든지 방침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호 다음은 임종득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 반갑습니다.

영주·영양·봉화 지역구의 임종득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인 영양에서도 이번에 산불의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현장에서 한 7일간 직접 산불진화 과정을 죽 지켜보고 함께했었는데 정말 과거에 생각하던 산불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위협이다라는 것을 느꼈고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위협으로 재인식하고 법적·제도적·예산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 차규근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규근 위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차규근입니다.

소속 상임위는 기재위인데요.

작년 6월에 감사원에서 감사보고서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감사 보고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산림재난 방재 당국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 낼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게 작년 6월 달 감사원 감사보고서 내용입니다.

올해 봄에 사상 유례가 없는 대형산불이 또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 대형산불이 왜 더 커지고 발생하고 있는지 그 근본 원인에 대한 문제 인식을 좀 하고 있고요.

이 산불특위에서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도 중요하지만 산불재난에 대한 대응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국회가 함께 진지하게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호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규근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한 2분만 주시면……

○위원장 김정호 의사진행발언이요?

○차규근 위원 예.

○위원장 김정호 그러면 먼저 하시지요.

○차규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오늘 업무현황 보고로 참석한 기관들이 기획재정부 등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요. 저는 다른 기관들이 여기 참석해야 되는데 좀 빠져 있는 부처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고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산불진화 시에 국방부의 군수송기 C-130 협조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빠져 있는데요 국방부 출석이 필요하지 않나 의견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임도와 관련해서 산림청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의 입장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산불특위에서 산림청과 환경부 사이의 그 이견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 어느 것이 맞는지 좀 진단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벌채목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이용되는 것과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를 발급하는 산자부의 출석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니깐 이 산불재난은 기후위기와 무관하지 않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유럽의회 환경위원회가 기후변화와 산림 파괴로 지목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감축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미이용 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산자부에서 그 기준을 마련해서 적용하고 있어서 이 기준 때문에 산불 난 이후에 피해목을 벌채해서 하는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자부 관계자도 출석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방부, 산자부, 환경부 관계자가 다음 회의에는 출석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정호 국방부, 산림청과 환경부. 산림청은 오셨고 환경부도 오셨고 산자부가 빠졌다. 그렇지요?

이것은 두 분 간사님과 의논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관련된 부분에 보고와 현안질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4분)

○위원장 김정호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4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주문에 따라서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 정수는 7인으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구성하며, 소위원장은 임미애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향후 소위 위원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소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법안심사소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야 간사님들과 위원장 간의 의논에 따라서 지난 번, 우리 열세 분 위원님들 중에 일곱 분만 이번에 법안심사소위에 참여를 하시게 되고 여섯 분이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 임기가 10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여섯 분을 다른 임무를 좀 찾아서 같이 해 나가는 게 어떠냐, 그중에 기후위기 시대에 이번의 대형산불뿐만이 아니라 여름에는 홍수 또 냉해 여러 가지 기후재난이 더 빈발하고 격화될 걸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관련된 기후재난에 대비하는 제도개선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고 이것을 기왕에 우리 산불특위지만 좀 더 넓혀서 이런 기후재난에 대비하는, 제도개선에 대해서 심도 깊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고 그런 대안들을 마련해 낸다면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법안소위가 급해서 출발을 합니다만 다음번쯤에는 제도개선소위도 남은 여섯 분 모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구성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공식적인 논의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추후에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안건으로 소위 구성안을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615)

3.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5)

4.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7)

5.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998)

6. 업무현황보고

가. 기획재정부

나. 행정안전부

다. 농림축산식품부

라. 중소벤처기업부

마. 소방청

바. 국가유산청

사. 산림청

(10시17분)

○위원장 **김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5항까지 4건의 특별법안과 의사일정 제6항 소관 기관 업무현황 보고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명과 법률안의 원문, 제안설명 등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국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임재금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금 요약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정안의 입법 배경입니다.

지난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경남·경북·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만여 ha의 산림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주택 피해, 도로 등 기반시설의 피해, 국가유산의 피해 등 피해가 복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2쪽입니다.

이에 김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을 비롯한 4건의 법률안은 초대형산불에 따른 피해 수습과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3쪽, 제정안의 체계입니다.

4건의 제정안은 크게 총칙,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피해 복구 지원, 산불 대응 역량 강화, 재정지원 및 규제 특례, 보칙 및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제정안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비롯한 기존의 법률과는 별도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번 초대형산불에 따른 피해 수습과 지원에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신중검토 입장인데 특별법을 제정하는 경우 기본법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고 정부의 피해 복구 계획에 따라 전례 없는 추가 지원방안이 이미 마련되었으므로 특별법 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5쪽입니다.

그러나 이번 초대형산불이 피해지역의 공동체 기반을 훼손할 정도의 피해를 발생시켜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 조치가 필요하고 현행 법률의 한계로 인하여 충분한 피해 복구 및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보았는데 첫째, 피해지역 지원 규정과 관련하여 현행 법령 체계 내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을 고려하여 중복 지원을 방지하되 피해지역에 필요한 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쪽 하단입니다.

둘째, 일부 제정안들에서는 이번 초대형산불 발생을 계기로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제도개선 사항을 특별법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재난방지법 등 일반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에 있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소관 기관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법률안의 대체토론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업무보고 순서는 정부 건제순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부 김윤상 제2차관님 나오셔서 산불 관련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북·경남·울산 대형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국회 산불특위가 논의에 앞장서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는 3월 산불이 발생한 이후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 및 정부의 재해·재난 대응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추경안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였고 의원님들의 관심과 도움 덕분에 5월 1일 추경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추경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역대 최대 추가 지원을 담은 산불 복구계획을 5월 2일에 확정하여 산불피해지역 주민분들이 온전히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불특위에서 주신 귀중한 논의를 바탕으로 산불피해지역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부 산불특위 업무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페이지입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한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각 부처 재해·재난 대책비 부족분 약 1조 원을 보강하고 피해지역 인근 신축 매입임대 1000호 공급과 산불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 및 온전한 복구를 위해 특별도시재생 및 마을복구재생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재난 예방을 위해 AI 감시카메라, 고성능 드론 등을 통해 탐지 역량을 고도화하고 산림헬기 6대 및 국립공원 대형헬기 1대 신규 도입, 산불진화차 확충 등을 통해 진화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산림 인프라 확대를 위해 산불진화임도 등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페이지입니다.

정부는 1조 9000억 원의 역대 최대 수준의 추가 지원을 담은 복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재난안전법 개정에 따라 향후 소상공인·중소기업 시설 복구 및 경영 안정 지원방안도 추가로 마련하는 등 산불피해지역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부 홍종완 사회재난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존경하는 김정호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안전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번 경북·경남·울산 대형산불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집과 삶의 터전을 잃고 아픔을 견디고 계신 이재민 여러분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중간 부분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의 주무부처로서 대형산불에 대한 수습과 복구, 지원 등에 관계부처 및 기관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 발생 이후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속히 가동하고 본부장이 7일간 현장에 상주하며 현장 총괄지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경북·경남·울산에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경남 산청을 시작으로 8개 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였습니다.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초고속 산불 주민대피체계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정책설명 및 점검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복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역대급 산불 피해로 인한 주거·생활 안정과 피해지역의 온전한 재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실성 있는 피해 지원을 위해 지원단가도 상향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재민 주거 및 심리 지원 관련하여 산불 발생 즉시 임시 대피 및 숙박시설을 제공하였고 수요조사를 통해 임시 주거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장례 지원을 비롯한 4900여 건의 현장 요청사항들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 재정 당국,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피해 지원과 제도개선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다가오는 우기 전 피해지역에 대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수목 제거, 마을순찰대 배치, 임시 조립주택 안전성 점검 등 관계부처·지자체와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불 발생 이후 지원 항목·대상을 확대하였으나 국회에서 발의된 특별법을 통해 추가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산불피해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번 산불로 삶의 터전과 재산을 잃은 아픔을 겪고 계신 농업인·지역주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농식품부도 농업인 여러분의 빠른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산불피해지역 농업인 지원대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 분야 피해 현황 및 대응 경과입니다.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 동안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농작물 1952ha, 가축 2만 2000마리, 과수재배시설 514ha, 비닐하우스 39ha, 축사 8ha, 농기계 1만 7000대 등 산불피해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산불이 급속히 확산된 3월 22일부터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상황실을 구성하고 산불진화 직후인 3월 31일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 지자체와 함께 피해 조사를 완료한 후 5월 2일 정부 합동으로 피해 복구 지원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농업 분야 피해 지원 추진 상황입니다.

우선 행안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원 기준 등을 개선함으로써 재해복구비 지원 규모를 기존 484억 원에서 1001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사과, 복숭아 등 피해가 큰 6개 농작물에 대한 대과대 지원단가를 100% 현실화하고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에 대한 보조율을 35%에서 45%로 상향하였습니다. 농기계 지원 대상도 11개 기종에서 38개로 확대하고 보조율도 35%에서 50%로 상향하였습니다. 생계비도 과수 등 작물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1개월분에서 일반 작물은 1~2개월, 채소·가축은 1~5개월, 과수는 7~11개월분까지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재해복구자금, 농기계구입자금 등 4개 농업정책자금 178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대출금리를 0.5%p 인하하여 지원하는 한편 54개 농업정책자금에 대해 최대 2년간 상환을 연기하고 이자도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피해 농업인의 신속한 영농 재개를 위한 지원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5000여 농가에게 농기계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농기계 회사와 협력하여 트랙터 등 농기계를 최대 40%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부족한 임대 농기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추경을 통한 농기계임대사업 지원 예산 24억 원도 5월 중순에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벼·콩 등 정부 보유 종자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한편 과수 묘목은 올해 포트묘 20만 주 생산시설을 구축하여 26년 봄부터 필요로 하는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축산농가를 위해서는 사료구매자금 1100억 원을 피해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농협 및 생산자 단체와 협업하여 사료 및 축산 기자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가축 진료를 위해 동물의료지원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가용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피해를 입은 축사의 신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 농업인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농촌주택 신축·리모델링에 필요한 용자 물량 200호를 추가 배정하였고 피해를 입은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도 피해지역에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농식품부 공직자와 유관기관 임직원들은 대규모 산불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농업인들의 영농 재개와 일상 회복에 어려움

이 없으신지 꼼꼼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에 힘을 보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대책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 김성섭 차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월 울산·경북·경남 지역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오늘 위원님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산불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황 및 지원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울산·경북·경남 지역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총 892개사이며 이 중 416개 사는 철거가 필요한 중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중 99%가 경북 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특히 영덕군과 안동시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특별 지원대책 마련,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첫째,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지원 체계를 즉시 가동하였습니다.

장차관을 포함한 간부진과 실무자가 피해지역을 60여 차례 방문하여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피해 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중앙합동지원센터에 필요 인력을 즉시 파견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 상담반을 운영하여 정책자금 안내, 재해확인서 발급, 애로사항 청취 등 종합적인 상담을 지원하였습니다.

자료 2페이지, 특별 지원 정책 부분입니다.

저희 중소벤처기업부 본부, 지방중기청,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하에 금융·비금융 지원을 동시에 실시하여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대책 추진에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정책자금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의 대출 한도 상향, 금리 인하, 만기 연장, 상환유예 등 특례 혜택과 함께 총 1096억 원을 지원하였고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일대일 전문가 컨설팅과 점포철거비, 원상복구비를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노란우산 공제를 통한 폐업 공제금도 즉시 지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피해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공공구매에 참여할 경우 직접생산 확인 예외 특례 부여, 수수료 면제 등의 규제완화 조치도 병행하였으며, 현재는 피해지역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개정된 재난안전법에 따라 세부 지원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불피해지역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위해 약 155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을 우선 편성하여 현재 신속한 집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 34억 원, 지역상권기획 및 역량강화사업 20억 원, 제조 현장의 로봇·자동

화 설비구축사업 101억 원 지원을 통해 피해지역의 빠른 회복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는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지원대책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살피며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청 허석곤 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장 허석곤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소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산불 관련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청은 지난 대형산불의 교훈을 바탕으로 국가 총력 동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교육 훈련과 장비 보강과 같은 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소방의 최우선 과제로 하여 24시간 신속하고 빈틈없는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쪽, 산불 대응 현황입니다.

이번 산불은 3월 21일부터 10일간 울산·경북·경남 3개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총 10만 3000여ha의 산림이 소실되고 83명의 인명피해와 8000여 건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었습니다.

소방청은 산불 발생 초기부터 지역별 대응 단계를 발령하고 긴급구조통제단을 운영하여 초동 조치에 주력하였고 산불 확산에 따라 최고 수위의 대응 단계와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하여 산불진화와 인명 보호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번 산불 기간 동안에는 총 1만 7000여 명의 소방 인력과 5900여 대의 장비, 9000여 명의 의용소방대가 투입되었으며 특히 소방 동원령 최고 단계인 3호 기준을 상회하는 가용한 모든 소방력을 전국에서 동원하여 총력 대응하였습니다.

2쪽, 현 상황 및 개선 방향입니다.

이번 산불은 기존의 대응체계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재난이었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이 예측을 벗어나 도심으로 급격히 확산되었습니다. 국민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기관 간 대응 상황과 핵심 정보의 신속한 공유를 통해 유기적인 협력 대응체계가 확립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비는 기관 간 역할과 기능에 따라 확충하되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자원의 범용적 활용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3쪽, 소방청의 산불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 중심의 총력 산불 대응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강풍 등 대형산불이 우려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동원령을 발령하여 대비하고 장비뿐만 아니라 가용한 최대 인력이 동원되도록 기준을 정비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에 대한 예산은 피해 시도가 아닌 국가가 책임 지원하겠습니다.

소방청은 최정예 산불진화대원으로 이루어진 중앙119산불진화대를 운영하여 언제 어느 곳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출동하여 시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강풍, 야간 등 공중 진화가 제한되는 악조건 속에서도 산불을 진압하고 위험에 처한 국민을 구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이 도심으로 확산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인명구조와 시설물 보호에 가용 소방력을 최우선 투입하고, 지자체 산림청 군 등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 확대와 공동 매뉴얼 마련, 합동훈련 등 공조·협업 체제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4쪽, 두 번째로 산불 현장에서 바로 작동될 수 있도록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방에서는 최근 5년간 전국 소방학교에서 252회에 걸쳐 2만 2000여 명에 대하여 산불 전문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이러한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첨단 지휘훈련시스템, 실 화재 훈련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을 높여 가겠습니다. 아울러 산불에도 활용성 높은 다목적 고성능 장비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산불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9만 2000여 명의 의용소방대가 산불 대응의 한 축을 이룰 수 있도록 역할과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주민 대피 등 산불 대응 훈련을 정례화하고 산림 인접 주민이 스스로 초기 진압하는 비상소화장치도 적재적소에 설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소방청은 이번 산불의 교훈을 철저히 되새기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가유산청 최응천 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김정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국가유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귀한 제언과 도움을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지난 산불과 관련한 국가유산의 피해 현황과 향후 개선 방향 등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주요 경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부터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발생하자 우리 청에서는 3월 25일 국가유산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가용 인원 750여 명을 총동원하여 유물 소산, 방염포 설치, 예방 살수, 주변 수목 제거 등의 긴급 보호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주불이 완료된 직후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피해를 입은 국가유산 36건의 복구 금액을 모두 488억 원으로 확정하고, 올해에는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사항 위주로 27억 원의 긴급복구비 예산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장 가이드라인을 개선하여 위기 상황 시 작동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동산 유물의 보호를 위하여 권역별 유물 소산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유산 현장마다 방염포를 비축하여 위기 시 신속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산불 상황에서 미흡한 사항은 보완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하여 운영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모의훈련을 분기별로 확대 실시하여 위기 시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위기경보도 산불, 풍수해, 대설 등 위기 징후에 따라 탄력적으로 발령하여 경각심을 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간, 휴일 등에도 재난 상황 관제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전 예방으로 재난관리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 및 재난 대응 실태를 점검 중에 있으며 재난 상황에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돌봄 활동을 보다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재해 발생이 대형화되고 있으므로 위험지도를 개발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재난안전 대응 기반 확충을 통한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국가유산의 재난안전 활동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방재 정책과 현장 대응으로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산불뿐 아니라 풍수해, 폭설 등 다양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방재설비를 지속 확충하고, 특히 이번 산불과 같은 외부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산불 소화시설과 방화림을 조성하여 국가유산 안전지대를 구축하겠습니다. 재난 피해가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복구비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국가유산 보호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청 임상섭 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경북·경남·울산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현황과 대응, 향후 대책을 보고드리게 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이번 산불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산불 대응 조치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산불로 약 10만 4000ha의 산림과 187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산림청은 이번 산불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였고 산림청장이 현장에서 산불진화를 지휘를 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롯해

소방, 군, 경찰, 국립공원, 문화재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산불진화인력 6만 7000여 명, 산불진화헬기 1000여 대, 산불진화차량 등 지상진화장비 8000여 대 등 가용자원을 총 동원하여 진화하였습니다.

산불 대응 평가와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산불은 성묘객 실화, 예초기와 용접 불티 등 사람의 부주의가 주요 원인이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 인접지 불씨 관리와 산불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 중심의 숲 구조와 울창해진 산림으로 인한 연료물질 증가, 산불진화임도 부족, 초속 27m 이상의 태풍급 돌풍 등 극한 기상에서 산불 대응의 한계점 등 근본적인 개선 과제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동시다발 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진화헬기, 진화차량, 진화인력 확충 등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산불 발생 이후 현재까지 추진 상황입니다.

산불피해지 중에서 산사태 토사유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6466개소를 선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안전팀을 파견하여 현장 점검하였고 점검 결과에 따라서 인명·재산 피해 우려 지역은 6월 말까지 응급조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산불 피해를 반영하여 산사태위험지도, 토석류 피해 예측지도를 긴급 조정하고 산사태 대피소 등 주민 대피체계를 재정비 중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은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여름철 산사태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피해지의 체계적인 복구를 위해서 지난 5월 산림청 지자체 임업단체 학계 NGO 등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산불피해 복원·복구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행안부 기상청 등과 함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 대피체계 개선방안을 지난 4월에 마련하였고, 인제·대구 산불 등에 시범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산불 피해 복구와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추경예산 48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업인 지원 및 산불 복구계획입니다.

임가 생활 안정 및 조속한 산림경영 복구를 위해 주요 피해 임산물 복구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보조율 인상, 정책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등 금융지원과 송이채취 피해임가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불로 피해를 입은 임목을 보상받기 위한 임목재해보험도 시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산불피해목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목재산업계, 원목생산업계, 지자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목재저장센터를 확충하여 피해목 활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진행 중인 목조건축사업에 산불피해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불피해지역은 산림 랜드마크를 만들어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소멸 대응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산불피해지 복원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주의 소득 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합리적인 복원 방법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사태 토사유출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방댐을 설치하고 산지사방과 계류보전사업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불 예방 및 대응력 강화 계획입니다.

산불 발생 위험지역 내 산불연료를 제거를 하고 산불에 강한 수종을 조림하여 산불 확산을 방지하고, 과밀한 숲을 솎아 주고 침엽수·활엽수 혼합림을 확대하는 등 산불에 취약한 숲 구조를 산불에 강한 숲 구조로 전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지상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임도를 확충을 하고 극한 강우를 대비하여 임도 설계 안정성도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과 같은 규모화된 산불재난과 복합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산불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산불 피해 복구 및 산불 대응 역량 강화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산불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를 병합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질의는 질의 순서에 따라 하되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5분, 5분, 3분 이렇게 얘기가 논의됐던데요 주질의는 5분으로 우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순서에 따라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박정현입니다.

이번 경북 산불을 사람들이 괴물산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초대형산불들이 기후위기 탓이라고도 진단하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로 인해서 산불 특성이 대형화, 연중화, 장기화되고 있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좀 보시면 2019년 동해안 산불, 2022년 울진·삼척 산불, 2025년 올해 울산·경북·경남 산불을 비교해 보면요 산불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지요. 2일에서 9일로 더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재산피해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에서 22년에 2배의 재산피해가 났다면 2022년에서 올해 재산피해는 거의 5배 정도 증가했고요. 산림 피해도 면적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구 비용도 점점 늘어나고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그냥 우리가 기후위기 탓이다 이렇게만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산림 면적이 4배가 더 넓습니다. 그런데 산불 피해면적은 최근에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요 산불 발생 빈도도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산림 현황과 우리가 비교를 잘 해 봐야지 되는 부분이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산불이 이렇게 대형화되고 장기화되는 게 산림 수종의 문제 그리고 진화인력의 문제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원인에 대한 정확한 점검을 해야지 변화한 산불 특성에 맞는 대책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휘체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석곤 소방청장, 안 보이는데요. 어쨌든 산림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를 산림청이 지휘

하지요?

○소방청장 허석곤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소방청은 어떤 역할을 하지요?

○소방청장 허석곤 산림청을 지원해서 같이 공조해서 산불을 끄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최근 산불은 산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 이 산불이 도심으로 확산 되는 경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때는 누가 책임을 지나요?

○소방청장 허석곤 저희들이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산림 내의 건축물이나 민가, 주요 시설물들이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화재를 진압하고 하는 것은 소방기관이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민가 보호 이런 것은 소방에서 하고 산림 화재는 산림청에서 한다는 거지요?

○소방청장 허석곤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산불이 민가와 산림을 구별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통합으로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예, 사실 경계가 없기 때문에 산림청과 지자체와 소방과 또 동원되는 군 경찰 모두 협력해서 불을 끄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홍종완 실장님!

○행정안전부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예.

○박정현 위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육상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모든 긴급한 조치는 소방청이 하게 돼 있지요?

○행정안전부사회재난실장 홍종완 긴급구조기관이라 그래 가지고 구조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화는 또 소방기본법의 소방활동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불 끄는 것을 하고 있고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산림 화재만 재난안전법보다 산림보호법이 우선하고 있는데요. 앞서 소방청장도 얘기했지만 이게 사실 육상 안에서 벌어지는 것은 산림이든 도심 안이든 구별이 잘 안 되는데, 이 법체계가 실제로 산림 화재 발생 시에 제대로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갖추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사회재난실장 홍종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재난법상의 규정에 대해서 산림청이 산불을 끄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산림보호법 그다음에 소방기본법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산림청이 실질적인 산불진화주관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 소방청은 이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박정현 위원 아니, 그걸 제가 몰라서 지금 질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법체계가 실제로 대형화되는 산불을 제대로 진화할 수 있냐 이것을 지금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사회재난실장 홍종완 그 부분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박정현 위원 그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일단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도 많은 부분에, 언론이라

든지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을……

○박정현 위원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예.

○박정현 위원 산림청장님, 산림 화재를 꼭 산림청이 전담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간이 지금 금방 됐네요.

○산림청장 임상섭 산불 같은 경우에는 예방부터 복구까지 다 일원화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산불 발생 빈도라든지 또 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개청 이래, 67년도에 산림청이 개청했는데요. 67년 이래로 산림청에서 계속 산불을 담당해 왔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정현 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제가 좀 마무리 답변을……

○위원장 김정호 마무리 답변 주시고 추가질의 때 더 하십시오.

○산림청장 임상섭 67년도 이후에 산림청에서 계속 산불을 꺼 왔고요. 이와 관련된 모든 국내의 연구자료라든지 DB라든지……

○박정현 위원 그 정도 하십시오. 계속해 왔기 때문에 산불진화를 산림청이 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의례적인 답변이고요. 지금 산불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으면 그거에 맞는 체계가, 변경이 돼야 되겠지요. 그런 정도 답변 듣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나중에.

○위원장 김정호 다음은 서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호 위원 사천·남해·하동 서천호 위원입니다.

진 부처에 해당이 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산불을 통해서도 재확인이 됐지만 재난·재해는 할 수 있다면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이번 산불 발생 원인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사람의 부주의가 99%로 지금 확인이 됐는데 또 실제로 예산편성이라든지 제도 보완 이 부분이 조금은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화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홍보라든지 사전 교육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그다음에 제도 보완하는 부분은 관련 부처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청장님, 이번 산불을 보면 주간에 불씨를 잡았다가 다시 야간에 재점화가 되는 그런 현상이 반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 하면 야간에 진압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했다는 거지요. 어둡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는 변명밖에 안 되는 것이고 결국은 주간에는 진화인력이라든지 역량이 충분히 투입이 됐는데 야간에는 방치를 했다, 그래서 야간 진화 능력을 충분히 보강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 동의하시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동의합니다.

○서천호 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이 역시 조금 초점이 흐려져 있지 않나, 진화 차원에서 야간 진압 능력을 보강하는 데 기재부차관님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서천호 위원 그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유산청장님, 지금 국가유산이 36건의 피해가 이번에 집계됐는데 맞나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맞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조치 사항에 여러 사항들이, 조치에 방염포를 설치한다든지 또 동산에 대해서는 이동 수단을 어떻게 한다든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산불과 관련된 부분은 부동산이잖아요. 그렇지요, 대체로?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부동산도 있고 동산이 있는데 저희들이 부동산의 경우는 방염포로 다 우선 조치를 했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래서 이제 보면 건물에 불길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소화설비를 확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맞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 부분이, 전국 국가유산 중에서 소화설비가 어느 정도 지금 확보돼 있나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국보의 경우는 저희 100%가 설치돼 있고요. 보물은 86% 정도인데 사실은 그 나머지는 소화설비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천호 위원 지금 소화설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마련이 돼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소화설비 작동 여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그건 점검하고 있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현재 정확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는 것 같아요, 일부에는. 그래서 그 예를 들겠습니다.

국가유산 건물 반경 몇 m 이내까지 살수를 할 수 있다 또 담수시설을 갖춰야 된다 또 자동살수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없다면 매뉴얼을 좀 보강해 주셨으면 좋겠고, 있다손치더라도 수시로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알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임상섭 청장님, 조금 전에 박정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현장에 보면 지휘체계 부분이 상당히, 혼선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참 어수선훁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가 법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잔불은 지자체장의 책임하에 하고 또 산불은 산림청장이 들불은 소방청이 책임지고 관리하는, 법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들불, 산불, 잔불이 한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책임이 구분돼 있고 지휘체계도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말이지요, 재난실장님 한번 재검토하셔야 됩니다.

○행정안전부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리하시고.

지금 현재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산불은 주관기관이 산림청이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맞습니다.

○서천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법적인 체계 부분 운용적인 체계 부분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나머지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걸 위원 먼저 행안부 실장님께 제가 여쭙볼게요.

이번에 복구소요가 1조 9000 정도 확정이 되고 지금 집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예.

○안도걸 위원 그런데 아마 피해가 발생했을 때 우선 긴급 수습하고 구호하고 하는 데에도 돈 좀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정부 지원이 얼마 정도 투입이 돼야 됩니까, 전체 규모가?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제가 다른 부분 실장이고 복구국장한테 정확하게 답변을 줌……

○안도걸 위원 아니,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숫자는 저한테 따로 알려 주시고.

그래서 정부 재정지원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진척 상황에 따라 가지고 각각 어떠한 돈들이 어떤 규모로 필요 되는지 이게 꼭 파악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재정뿐만 아니고 금융지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기부차관님 계십니까마는 소상공인이라든지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 금융지원이 가거든요. 그래서 금융지원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전체를 합계로 해 가지고 지금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게 파악이 돼야 되고, 또 각 예산이라든가 금융 내역별로 진행 사항들이 체크가 돼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이재민이라든지 또 피해를 본 중소·소상공인들이 혜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걸 파악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파악해서 알려 주시고.

현재 복구계획이 5월 2일에 됐으니까 벌써 한 달 됐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행정안전부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지금……

○안도걸 위원 지금 중앙행정지원센터는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사회재난실장 홍종완 ……

○안도걸 위원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이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계획이 아니고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지요. 이분들은 특히나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생업 터가 완전히 불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시 복구를 해서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할 것이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고 오늘내일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집행 상황이 철저히 점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집행 체계를 어떻게 가동시키고 있는지 별도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예.

○안도걸 위원 그리고 기재부차관님, 추경 있잖아요. 일차적으로 해 가지고 3.3조, 그 안에 복구비 쪽으로 해 가지고 한 1.4조 정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2차 추경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2차 추경의 지원소요는 없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요. 산불 피해 복구와 관련된 부분은 아직 검토한 부분은 없고, 지금 내부적으로 실무 검토 중인 사항이라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도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거든요. 복구계획에 따라 집행이 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적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부족하다든지 남는다든지라고 하고, 특히나 부족하다면 2차 추경 소요가 아마 지금 잡혔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건대 현재 상당 부분 우리가 계획에서 머물러 있고 집행 점검이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집행을 하다 보면 반드시 부족한 소요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의 추경 때도 긴급한 것은 추가 요구가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 종합적으로 챙겨야 되는 부처가 아마 행안부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전번에 중앙행정지원센터라는 걸 운영했는데 지금 그와 유사한 집행을 점검하는 체계를 갖춰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실시간 집행을 좀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건대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일터입니다. 저도 가 봤는데 특히 중소기업 공장이 홀라당 다 타 버렸더라고요.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중소기업의 시설 복구 및 경영 안정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행령을 만들려고 하면 6개월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12월 달 다 돼 버려요. 그래서 지원 시점에 있어서도 지금 좀 서둘러야 되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 지금 지원을 하겠다 하는데 지원의 내용을 지금 용역 중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지금 용역은 저희가 5월 달에 발주를 해서 현재 피해금액 산정 그다음에 지원금액 단가 같은 것을 연구하고 있고요.

○**안도결 위원** 지원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금융지원에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 현금지원까지 갈 것이냐 그것 아니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그렇습니다.

○**안도결 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현재는 저희가 금융지원 위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법이 개정된 것에 따라서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지원 기준을 따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안도결 위원** 그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금융지원이라면 지금도 금융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그렇습니다.

○**안도결 위원** 이 법의 취지는 그것을 넘어서는 지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관건이 되는 그에 대한 검토 결과가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국회에도 보고를 해 주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금융지원하겠다고 하면 하나 마나 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그것은 저희가 급한 대로 먼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침에 따라서 융자지원을 시작했구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도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지침에서도 특례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그렇습니다.

○안도결 위원 특례지원을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완을 좀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이번에 법에서 제정한 취지는 그게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지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그것은 저희가……

○안도결 위원 그것을 기재부 재정 당국하고도 협의가 좀 됐어야 되고. 그런데 거기서 금융지원에 국한해 가지고 하겠다 하면 진도가 사실상 안 나간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제가 말씀드리는데 법이 개정되기 전에 우선 저희가 필요한 상황에서 현재 기준을 가지고 융자지원을 먼저 시작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법이 5월 달에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새로운 지원 기준과 단가를 산정해 가지고……

○안도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금융지원은 지금도 되고 있고 그것을 빨리 신속하게 집행하면 될 일이고 거기서 약간의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면 되는 거지요, 지침을 통해서.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그렇습니다.

○안도결 위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다시 시설이나 설비투자를 하실 분들은 당장에 현금지원도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 결과가 나왔어야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저희가 용역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안도결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안도결 위원님, 일단 추가질의하시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위원장님, 안도결 위원님 질문에 30초만 답변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정호 10초?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30초요.

○위원장 김정호 30초?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안도결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저희가 집행 실적은 매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 5월 한 달 동안 행안부하고 환경부 예산 6000억이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7월까지 전체 추경예산의 70% 집행을 목표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집행 과정에 혹시나 모자라는 것을 대비해서 이번

에 1차 추경을 할 때 예비비로 1조 4000억을 담았고요. 그중에 1조가 재해·재난과 관련해서 쓸 수 있는 목적예비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면 목적예비비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충분히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그 집행 실적을 전체 위원님들께 좀 공유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다음은 신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범 위원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신성범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느낀 걸 말씀드리면 산불은 안 나면 좋겠지만 완벽하게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뉴노멀로 보는 게 맞다. 그것은 주민들의 의식수준 문제도 있을 테고 굉장히 심각하다. 따라서 이걸 촘촘히 물 썰 틈 없이 막자는 주의로 가면 비현실적일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또 하나는 아시는 대로 이게 대응체계 구축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제가 현장에서 느낀 바는 정말 지역사회의 총력전이구나. 다시 말하면 산림청이나 소방, 경찰뿐만 아니라 행정, 좀 더 좁히면 면사무소의 직원, 이장님까지 다 동원되는 거다, 이게. 심지어는 어르신들께서는 경찰이 가서 아무리 ‘불 옵니다. 피하세요’ 해도 여기서 안 나오려 그래요. 그러면 사실은 경찰관이 가서 고지도 하고 면 직원과 이장이 가서 ‘이런 식으로 하면 공무원이 나중에 처벌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나오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배치, 구호물품의 정리, 심지어는 이런 것까지도 이장과 지역사회가 다 동원돼야 된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고요. 경찰 소방 행정 주민, 다 마찬가지다. 이런 점에서는 대응체계 구축에서 긴요한 점이다, 따라서 헬리콥터를 큰 것 몇 대 갖다 놓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더라는 점을 좀 더 현실감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여쭙볼게요.

청장님, 임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유림에서 임도 하면 결국은 사유림 소유자가, 산주가 자기 돈 들어가니까 안 하잖아요. 또 부채 산주잖아, 대부분 다. 도시에 있고.

○산림청장 임상섭 예, 맞습니다.

○신성범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하라고 한들 하겠어요, 필요하다고 한들? 그래서 사유림에 임도를 개설하려면 산림자원법 개정, 별도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뭘니까, 여기에 포함돼야 될 요소가?

○산림청장 임상섭 지금 산주 동의를 받아서 사유림 지역에 임도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산불같이 재난 때문에 필수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사유림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필요에 의해서도 하지만 국가나 지역 전반적인 시스템 체계 연결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범 위원 법조문을 준비할 수 있겠어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지금 농해수위의 윤준병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 내용도 있고요. 개정 수요 내용도 다 있습니다.

○신성범 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이게 참, 시골에서는 어르신들 오래 사신 분들은 결국은 비가 와야 산불 꺼지고, 맞불 이야기합니다, 맞불. 그게 행정 용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 대응소각 사

전소각 이런 건데 이런 것도 매뉴얼에 넣을 수 있습니까? 책임 범위를 어떻게 하고 어느 단위에서 판단하여 이른바 맞불을 지를 수 있는 권한과 이런 걸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매뉴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외국에는 처방화입이라 그래서 미리 소각하는 게 있습니다.

○신성범 위원 잠깐만. 그걸 영어로 뭐라 그래요?

○산림청장 임상섭 프리스크라이브드 파이어 매니지먼트(prescribed fire management).

○신성범 위원 프리?

○산림청장 임상섭 프리스크라이브드.

○신성범 위원 처방화재?

○산림청장 임상섭 처방화.

○신성범 위원 좋아요. 그런 것 해 보시고.

홍종완 실장님,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드론하고 AI 활용하는 것은 거기서 해 줘야 돼요. 실제 산림청에서는 잘 못 할 것 같고, 밤에 포착하는 거라든지 또 AI로 해서 예측하는 시스템 이런 것은 행안부에서 돈 들여서 해 줘야 된다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AI와 드론 활용?

○행정안전부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저희들이 부처별로 협의를 해서 재난 연구개발이 필요한 부분이 R&D가 필요하다면 R&D 역량도 집중하고요. 그다음에 예산 확보 이런 부분도 챙기고 있습니다.

○신성범 위원 야간 산불 감시라든지 산불의 확산 모델 구축 이런 것은 정확하게 어디 한 군데에서 해 주셔야 돼요, 말기지 말고. 그냥 산불 나면 보고하는 체제로 가지 말고,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AI 드론 연구를 행안부에서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예,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볼 게, 그때 처음에 ‘대공 용의점이 있다’ ‘산불이 이렇게 나는 것 보니까 특정 국적자의 소행이다’ 이런 게 있었는데 하나라도 확인된 게 있습니까? 누가 답할 수 있나요, 이것?

○산림청장 임상섭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번에 경남 지역, 영남 지역에 발생한 산불 발화자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전혀 아니고요. 다 지역주민이나 부주의의 영농 부산물 소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발화된 것 같습니다.

○신성범 위원 다 확인이 됐어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신성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택 위원 이번 산불과 관련해서는 진화가 제대로 됐는지 또 대피 조치는 제대로 됐는지 또 피해 지원과 복구가 실질적으로 신속하게 됐는지가 사실 양 측의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진화가 제대로 됐는지, 또 대피 조치는 제대로 됐는지, 또 대응체계와 매뉴얼은 제대로 작동됐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사회재난실장님, 고기동 차관이 안 오셨으니까 다시……

(영상자료를 보며)

PPT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22일 날 중대본이 설치됐지요?

○행정안전부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예.

○이원택 위원 3월 24일 날 한덕수 권한대행이 방문했고요, 25일 날 의성 산불이 영덕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다음에 3월 26일 날 경북 지역 산불이 최대한 확대가 됐지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예.

○이원택 위원 그렇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3월 24일 날 한덕수 대행이 왔을 때 사실 의성 산불이 초대형화가 됩니다. 이때 권한대행 중심의 중수본 체제로 전환을 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인적자원 가용자원을 총동원했어야 되는데 그걸 놓쳤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 3월 25일 의성 산불 확대가 되는 때도 전환이 안 됐습니다. 또 26일 날도 전환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비가 와서 조금 줄어들었는데, 지휘체계에서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수 있는 권한대행 체계의 중수본 체계의 전환이 늦은 측면이 있다는 걸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PPT 넘겨 주겠습니까?

좌측이 2019년 4월 산불 사례인데요. 우측이 25년 3월, 의성군에서 3월 22일 날 화재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전국 다발적으로 발생했지만 부채꼴 모양으로 동해 쪽으로 바람이 갑니다. 그렇지요? 예상하지 못한 돌풍도 있고 무엇도 있고,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면 이 반경에 있는 지자체에서는 비상조치 대기를 해야겠지요? 재난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예, 맞습니다.

○이원택 위원 해야잖아요?

넘겨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영덕군 사례만 보면 3월 22일 날 발화가 됐고, 24일 날 초대형산불로 전환되는 데도 25일 날 18시 21분에 문자가 가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21시 01분에 최초 경고문자가 갑니다. 대응·대피 체계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또 넘겨 주시겠습니까?

행안부가 확산 기간에 발송한 공문 내역을 보십시오.

24, 25, 26, 그 해당 지역에 대한 긴급대피 조치 공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피에 대한 긴급 매뉴얼이 작동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22일, 적어도 24일 정도만 예상 지역에 대한 긴급대피 조치 명령을 했더라도 인명 구제는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넘겨 주시겠습니까?

또 하나는 중수본에서 알아야 될 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이제는.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자체의 진화 역량하고 또 산림청·중수본 진화 역량을 초기에 동원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든타임제에 대한 지적이 23년 감사원의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매뉴얼화돼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이번 철저한 분석 중의 하나로 점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넘겨 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대응체계가 산불 1단계, 2단계, 산불 3단계, 산불 4단계 이렇게 4단계 체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은 초기에 과도하게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대응 매뉴얼을 4단계를 2단계로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2단계를 합쳐서 도하고 시군이 초기 산불에 초기 진화 역량을 집중해서 꺼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산불 3단계인 대형산불과 초대형산불은 산림청 주관하에 또 국가 중수본 주관하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산불은 예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에 진화 역량을 그렇게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매뉴얼이 화재에 신속하고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원인 중의 하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중수본 운영체계에서 지휘체계의 문제를 한번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두 번째가 대피 조치에 대한 문제, 세 번째가 골든타임과 매뉴얼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작동체계의 근본적 문제를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위원님 말씀에 대부분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예측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요. 그 부분은 관계부처랑 같이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이미 산불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 속에서 교훈을 철저히 따져서 추후 대책에 정확히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달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회 위원** 지방시대를 열어 가는 이달회 위원입니다.

산림청장님, 아까 산림청에 산불 관련해서 예방·진화·복구 박정현 위원님 질의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현장에서 산불을 많이 접해 본 입장에서는 예방·복구는 산림청이 맡고 진화는 소방청으로 일원화돼야 된다 불 끄는 모든 일은 소방청으로 일원화돼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행안부 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부서가 함께 검토하신다니까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듣고 지휘체계를 다시 한번 짜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2차관님 이런 대규모 산불이 나면, 그렇지 않아도 지역의 지방소멸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산불이 나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특히 지방소멸이 가속화되지 않을까요? 또 불났는데 인근에 살기보다는 도시로다 이

전하거나. 그런데 우리 국토에서 지방이 소멸하면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불이 난 대규모 지역에, 경상북도가 하고자 하는 재창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불난 지역에 스마트팜이나 이런 것 넣어서 새로운 모습의 마을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니까 기획재정부는 특별법 제정에 실익이 없어서 이 특별법을 만드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시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4월 초부터 해서 4개의 특별법안이 발의된 것은 저희들 너무 잘 알고 있고요. 5월 1일 날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정부 추경안을 제출할 때 특별법에서 많이 제기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추경안에 담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 특별법안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그 법안에서 여러 가지 제기했던 부분들이 이미 저희가 추경안에 충분히 담았고 그 추경안을 베이스로 해서 5월 2일 날 복구계획에 그동안 했던 것에 전례 없이 많은 추가 지원을 담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실익이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견을 낸 건데요. 소위 과정에서 혹시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 참여해서 보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차관님 말씀하신 부분은 피해자들 지원이라든가 일상 회복 같은 그런 부분이고 또 2차 피해의 예방 부분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항구적인 새로운 재건을, 어차피 불이 나서 폐허가 됐는데 폐허가 됐을 때……

산림청장님 산림이 폐허가, 이렇게 불에 타 있으면 그다음 복구는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그냥 둥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원래 원상회복으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이달희 위원** 어떤 모습이 원상회복이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산이었다면 산으로 다시 복원을 하고요.

○**이달희 위원** 산으로 복원하면, 그렇게 넓은 지역의 불탄 나무를 뽑아내고 심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잘라 내고 피해목 같은 것은 제거를 하고요 조림을 하든지 아니면 자연 복원되도록 유도를 하든지 원칙은 그렇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차관님, 그래서 지금 경상북도에서 하고 싶은 일은 이렇게 불탄 곳에, 아주 나지막한 산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재개발해서 스마트팜을 유치하겠다는, 그리고 유치할 민간 자본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물론 처음 마련할 때 기반 조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재정지원이, 국가 지원이 조금 필요하겠지요. 전체를 다 달라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역 재창조 관점에서.

5월 2일 날 발표하신 추경안은 피해자들 일상 회복하고 그리고 2차 피해 나지 않도록 하는 그 정도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역에서 말하는 재창조 부분은 새로운 마을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니까 관심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피해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플랜은 꼭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도 경상북도 같은 지자체와 많이 소통을 하고 있는데 아마 재정지원 그 이전에 산지전용이나 농지전용 같은 규제의 문제도 약간 같이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달희 위원 예, 맞습니다. 그걸 특별법에 담고자 합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이 종합적으로 잘 소위 논의 과정에서 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성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성무 위원 임상섭 산림청장님!

○산림청장 임상섭 예.

○허성무 위원 (책을 들어 보이며)

이 책 보이시나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고 있습니다.

○허성무 위원 이 책 누가 편찬했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산림청에서 의뢰를 해서 우리 관련 협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성무 위원 이것 총괄하고 주관하셨던 분이 차장으로서 재직하실 때 임 청장님이 책임지고 하신 거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맞습니다.

○허성무 위원 저도 이 책을 이번에 처음 봤는데요. 보니까 이미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어요. 이번에 내놓는 대책이나 모든 내용도 이미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22년 산불에 대한 백서로 2023년에 이 책을 발간하셨는데 이 책에 보면 온갖 대안들을 다 넣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실천이 잘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산불이 나면 또 반복되는 이런 큰 아픔을 겪게 되는데요.

이 안에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7년까지 내화수림대 즉 불막이 숲 2718ha 조성하겠다고 했는데도 이미 세월이 반 이상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더 조성이 됐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지금 현재까지 2025년까지는 1900ha 정도 조성했습니다.

○허성무 위원 1900ha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허성무 위원 그다음에 숲가꾸기를 통해 나무 간 이격거리·공간 확보하겠다고 하시고 2023년에 2만 8000ha에서 27년에 20만ha까지 하시겠다고 했어요.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지금 한 7만 7000ha 정도 했습니다.

○허성무 위원 이것은 목표에 많이 미달하네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그렇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다음에 첨단과학기술 활용하여 산불 감시 및 예측 정보를 고도화하겠다 하고서 23년도에 10개의 ICT 플랫폼을 27년도까지 50개로 확대하겠다 했는데 지금 몇 개 확대됐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지금 올해까지 45개소 했습니다.

○**허성무 위원** 이것은 거의 목표에 달성했네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허성무 위원** 그다음에 대형 동시다발 산불 대응하기 위해서 진화자원 확충 이야기를 하셨는데 23년에 18대의 고성능 진화차를 27년까지 100대로 확충하겠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몇 대 확보되어 있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현재 96대입니다.

○**허성무 위원** 그러면 이것도 거의 목표치에 가깝게 다 확충이 됐다. 그렇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허성무 위원** 그다음에 진화대원이지요. 2023년 435명에서 2050명까지 산림청, 지자체 합쳐서 늘리겠다 했는데 지금 몇 명 정도 늘려져 있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435명에서 이번 추정 해서 495명, 60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허성무 위원** 이것은 거의 미흡하다. 그렇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허성무 위원** 그다음에 야간 산불진화 효율 5배로 높이기 위해서 산불진화임도 23년에 594km에서 27년까지 3000km로 확충하겠다 했는데 몇 km 확충됐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한 절반, 1500km 정도 했습니다.

○**허성무 위원** 확충이 됐어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허성무 위원**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해 왔지만 이번에 일어난 산불은 오히려 규모가 5배 이상 커지고 인명피해도 31명으로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된 데는 많은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지만 결국은 예산 당국의 예산 협조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산림청 자체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이런 등등으로 해서 원래 계획들이 추진이 잘 안 되는 것도 큰 원인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방금 여기서도 지적됐듯이. 그렇지요?

부분적으로는 상당한 목표에 도달한 것도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아주 미흡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산 측면은 기재부하고 항상 협의해서요 가용 가능한 범위에서 충분히 저희 협조를 받고 있기는 한데 부처 생각하고 또 재정 당국하고의 의견이 조율이 돼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런데 예산뿐만이 아닙니다, 위원님. 사실은 거기 백서에도 나와 있지만 법 같은 것도 제정이나 개정이 좀 신속하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자꾸 좀 더디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거는 나중에 추가질문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특별법도 만들고 이 특위를 만들어서 하는 목적이 그런 제도개선을 하는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결국은 특별법을 해서 특별한 재난에 특별한 지원을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행안부가 사회재난 총괄 부서인데 산불 부분은 산림청에 맡겨 놓고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연구를 하거나 무슨 계획을 세우거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저희 행안부 말씀하시는 거지요?

○**허성무 위원** 예.

○**행정안전부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같이 협조해서……

○**허성무 위원**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예를 들어서 산림청이 만약에 국방부랑 협의를 한다든지 다른 부처랑 협의를 한다든지 할 때는 저희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 역할도 하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지 산불재난 자체에 대한 연구를 하거나 이런 노력은 따로 하고 계시는 건 아니지요?

○**행정안전부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예를 들어서 진화차량 같은 경우도 행안부 예산으로 행안부 R&D 가지고 진화차량을 개발한 적도 있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하는 일도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허성무 위원** 지금 워낙 대형화되고 괴물이라고 불리는 산불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행안부 사회재난실에서도 이렇게 산림청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주요한 업무 중의 하나로서 넣고 실질적인 산불에 대한 재난 연구를 동시에 같이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의향이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사회재난실장 홍종완**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5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산림청장님, 그러면 2003년에 이 백서를 냈듯이 올해 이렇게 대응하고 2026년에 백서 내시겠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저희는 대형산불이 나면 매년 반성을 하고 계획에 대해서 백서를 썼습니다.

○**허성무 위원** 실효성 있는 백서를 내 주시고요. 반복되지 않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허성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경북 영천·청도 지역 이만희 위원입니다.

차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제가 여기 법률안 검토보고를 보면서 차관님이 기재부에서 특별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신 내용도 사실상 봤는데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차관님, 기본적으로 특별법 제안·제출된 것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제가 4개 법안을 조문별로 다 읽어 보지는 않았지만 대략

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다는 부분들은……

○이만희 위원 어떤 내용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부분들 있고요. 그다음에 피해에 대한 피해 배상·보상 위원회를 설치해서, 배상·보상 부분이 있겠고요.

○이만희 위원 제가 보면 제대로 읽어 보시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기재부의 반대 입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형해화된다, 이미 예산이 나갔으니 특별법 제정의 실익이 크지가 않다 또 복구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은 보험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이다 이런 정도의 답변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특별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하셨는데요. 너무 현실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현장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복구와 원상회복은 물론이고 이게 제대로 집행되기 어렵겠다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지역소멸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이 특별법 문제를 제안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응하는 기재부라든지 정부의 대처들은 너무너무 안이하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차관님 말씀하니까 농림부차관님도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던데, 특별법 내용을 보면 지역의 피해 복구를 통해서 새로운 재창조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특별법의 내용들은 각종 규제로 그물처럼 얽아매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특별하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신속한 복구와 새로운 지역사회 형성을 위해서 좀 여러 가지 규제들을 완화하자는 것에 주안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지법, 그렇지요? 농지법 해제 권한이 농림부장관에게 있잖아요, 농지전용 구역에 대한 해제 권한이. 그걸 한시적으로 도지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위임하자 또 공동 영농 모델을 지금 경상북도에서 개발하고 상당히 실효적인데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기 위해서 농지법 23조 임대차 규정을 좀 완화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산림청장님!

○산림청장 임상섭 예.

○이만희 위원 지금 피해지역에 대한 산림에 대해서 보전산지가 몇 %예요?

○산림청장 임상섭 제가 그 데이터가 지금 확실히……

○이만희 위원 보전산지가 83%입니다. 보전산지는 말씀 그대로 다른 개발행위를 최대한 줄이는 것 아니겠어요? 산지의 공공적인 목적 그대로 가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관리법을,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원상회복보다는 그걸 넘어서는 복구를 해 보자. 그래서 8조, 18조, 14조, 15조에 대해서 특례를 좀 인정하자 그 내용입니다, 특례법이. 또 환경영향평가 하는 사업들 모두 다, 사전 환경영향평가 받아야 되는 사업 많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완화해 주자.

체육시설 짓는 것까지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결정 구조라든지 설치 기준에 대한 규칙도 좀 완화해 주자. 또 마을 재건 사업들, 타 버린 마을을 새롭게 지으려고 하면 도시개발법 관련 규정도 좀 완화해 주자. 얼마나 많습니까. 하다못해 중소기업에 대한 외국인 출입국 제한 규정에 대한 체류 규정도 좀 완화해 주자, 이런 그물처럼 갖고 있는 그런 규제들을 좀 완화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일상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반대 부분들을 내세운 것은 현장의 사항들을, 현장의 목소리들을 반영하기에는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특별법이 필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특별법을 낸 겁니다.

차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말씀 주신 부분들을 소위에서 적극 참여해서 논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농림부차관님, 이번 피해에 농업 분야의 피해도 굉장히 크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이만희 위원** 전체 정비계획의 15% 이상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농림부에서 좀 전향적인 자세에서 여러 가지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특별법 제정도 마찬가지로입니다만 특별법 되기 이전이라도 농지전용이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만희 위원** 그 권한을 현장에 계시는 자치단체장에게 대폭적으로 한시적으로라도 위임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법 개정안도 나와 있고요. 농지법 개정안도 나와 있고 시행령 고쳐 가지고 진흥지역 아닌 것에 대해서는 다 지자체로 넘기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이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규근 위원** 산림청장님, 산불진화차량이 임도에 진입해서 산불진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출동 내역이 문서로 다 관리가 되고 있지요, 언제 출동 지시를 받았고 어디까지 가서 산불진화 작업을 했는지? 당연히 우리 관공서에서 사람이 출장 가더라도 다 관리하듯이 진화차량도 다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을 것 같은데 맞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제가 헬기는 정확하게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진화차량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아니, 산림청장님께서 이 정도 질의에 대해서는 바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헬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데 진화차량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다?

○**산림청장 임상섭** 진화차량은……

○**차규근 위원** 좋습니다.

저희가 4월 26일에 관련 질의를 했는데 5월 9일에 답변이 왔습니다. ‘동시다발 산불 발생에 따라 세부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 중임을 양해해 달라’, 5월 9일하고도 한 달 정도 지났거든요. 오늘 오후 보충질의 전까지 관련 자료 좀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청장님, 산불진화헬기 말씀하셨는데 산불진화헬기 골든타임에 대해서 여쭙보겠습니다.

골든타임이 현재 몇 분으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지금 신고 접수해서 물 뿌리는 첫 물 투하까지 50분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 말씀하셨습니다만 2014년 당시에 출동 지시, 현장 도착 소요 시간 30분으로 관리하다가 2017년 감사원의 골든타임 재설계 요구에 따라서 2018년에 현재와 같은 산불진화헬기 골든타임제 개선운용계획 제시하셨지요. 그렇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맞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런데 이행률 제고하겠다는데 이행계획을 감사원에 제출하고 산림청 내부에서는 신고 접수를 기준으로 하는 골든타임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출동 지시부터 물 투하 단계에 소요된 시간만을 골든타임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감사원에서 다 지적……

○차규근 위원 잘못했습니까, 잘못 안 했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잘못된 사항입니다.

○차규근 위원 애초에 신고 접수 기준으로 했을 때의 운용 목표치인데 왜 출동 지시를 기준으로 이행률을 달성한 것처럼 운용하셨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고의로 저희들이 속이려고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담당자들 업무 인수인계하면서 관행적으로 하던 것들이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규근 위원 관행적으로 하던 게 업무 실수였다? 참 납득이 안 갑니다. 좋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골든타임제 이행률이 목표치에 미달하는데 국회에 목표치를 달성한 것처럼 허위 자료 제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그것도……

○차규근 위원 저는 이 감사원 감사보고서 읽으면서 충격받았습니다. 2025년도에 대한 민국에 이런 행정기관이 있다는 사실에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이런 안이하고 무책임한 기관에 대해서 산불 진화·예방 그 책임을 믿고 국민들이 잠을 잘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청장님, 이번 산불특위 관련해서 혹시 기존에 언론에 인터뷰하시거나, 아니면 보도자료 배포하신 거나, 아니면 국회에 답변하거나 자료제출한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 혹시 있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제가 현재까지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 있으면 안 되시겠지요. 그렇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차규근 위원 한 치라도 거짓된 답변이나 자료제출이 있다고 그러면 각오하셔야 될 것입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청장님, 임도의 정의는 뭐지요? 어디에 임도 정의가 나와 있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법적으로 딱히 나온 건 없고요. 우리 교과서에 임산물 수송이나 운

반 또 산림 작업에 필요한 도로를 임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 청장님, 임도는 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십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어디……

○차규근 위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라목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라 한다)’.

○산림청장 임상섭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차규근 위원 아니 청장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청 소관 법률 중에 엄청나게 중요한 법률 아닙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죄송합니다.

○차규근 위원 죄송하다고 될 문제인가요?

○산림청장 임상섭 법에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차규근 위원 참 말문이 막히네요.

청장님, 임도 관련해서 제가 서면질의를 했는데 서면질의 답변을 산림청 어느 부서에 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임도에 대해서요?

○차규근 위원 예.

○산림청장 임상섭 목재산업과……

○차규근 위원 목재산업과입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차규근 위원 무슨 말이나 하면 임도라는 것은 원래 산불 예방·진화를 위해서 설치한 도로가 아니에요. 산림 경영, 목재산업을 위해서 설치한 도로라고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 영주·영양·봉화 출신 임종득 위원입니다.

산불의 대형화·장기화 문제 그것은 새로운 위협의 대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업무 보고하시는 내용들을 죽 보면 전향적인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미치지 못한 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질문한 내용이 산불과 관련된 조기경보 지휘체계에 대한 컨트롤타워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보고 내용을 보면 그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특히 관련 기관인 행안부, 산림청에서 유념해서 좀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아까 산림청장님께서 67년간 산불 예방 및 복구에 대한 주관기관으로서 역할을 해 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지금 산불의 위협의 변화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산림청이 주관기관으로서 다 컨트롤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때라고 보여요. 그 과정에서는 행안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재난의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산불에 대한 대응, 조기경보 이 부분은 지자체와 긴밀하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감시하면서 조기경보가 돼야 되고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평소에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교육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과연 산림청이 계속해 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가 지금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주무부처인 행안부에서 이것을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전반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줘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임종득 위원 아까 AI 감시카메라, 고성능 드론 관련해 가지고 한 118억 정도 예산 할당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임종득 위원 지금 이 부분이 조기 경보와 대응에 관련되는 되게 중요한 예산인데 그게 어디로 갔지요? 산림청으로 갔습니까, 행안부로 갔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산림청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산림청으로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임종득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지금 보면 드론 같은 경우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산림청에서도 드론을 운영하고 지자체에서도 운영을 합니다. 교육도 따로따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복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24시간 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상황실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실과 연계가 되어서 AI 감시장비라든가 그다음에 첨단 드론을 이용한 것들이 수시로 상황실로 전파되고 그것이 경보 전파로 가고 거기에 따른 대응하고 있는 인원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골든타임을 지켜 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산불을 대비하는 과정 속에서 부처 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이 제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안부 실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을 연구조사 한번 해 보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을 내 일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산불과 관련돼서 제대로 어떻게 산림청과 업무분장을 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와 어떻게 연계해 가지고 평소에 시스템을 갖출 것이며 그 시스템들이 작동되는지를 확인할 것이며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이 뭐고 또 평소에 교육이 뭐가 필요한 것인지, 여기서 중복 요인이 있으면 그러면 어디에다가 정리를 해 줄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있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산불 나고도 아직까지 대응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명심을 하겠고요. 저희가 사회재난실에 환경재난대응과랑 산림·산불에 관련된 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협조체제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부족한 사항들이, 이번에 초고속이라는 부분 때문에 많은 약점들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하루빨리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감사합니다.

산림청장님!

○산림청장 임상섭 예.

○임종득 위원 임도와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종합해 보면 임도가 필요한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제한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필요한 양에 턱없이 못 미치는 임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거기에서 제기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의 문제, 이것이 시간을 많이 걸리게 하고 제한이 있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 산 주인의 부담금 문제, 10%이지 않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임종득 위원 그러면 1km당 약 3억 5000 든다고 그러면 1km를 내기 위해서 3500만 원을 산 주인이 내라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만 제기할 게 아니고 그러면 법을 어떻게 개정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환경부와 충돌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 훼손에 관련된 것?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산주 부담 문제는 사실은 국고 말고 지방비에서 산주 부담분 10%를 부담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 물론 산림 내에 인위적인 시설물을 설치하면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도로라든지 택지라든지 과수원, 농지라든지 다 마찬가지로인 것 같고요. 문제는 얼마나 튼튼하게 산불이라든지 산림 경영하는 데 활용도가 높게 지을 수 있는지 그런 측면을 고려를 해서 관련된 법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임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동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동 위원 경북 안동·예천의 김형동입니다.

산불 이후에 국회 본회의도 있었고 추경에서도, 자리하신 분들이 아마 이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그 이후에 질의자가 느낀 점 위주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김형동 위원 또 행안부의 실장님 나오셨지요?

○행정안전부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예.

○김형동 위원 이재민 평가를 내렸는데 그때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저는 이재민의 개념이 좀 다양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산불 이후에 직접적으로 피해 입은 분들도 있지만 그 이후에 질병이나 노환이나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신체·생명에 대한 문제가 생긴 분들까지도 추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차관께 말씀을 드리면, 피해면적도 비슷합니다. 지금 그때 이후에 더 추산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보면 퍼런데 밑에 보면 다 타 가지고 그 산이 오래갈 수 있

을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지요. 다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재해 피해에 대한 추가 보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김형동 위원 행안부 실장님, 임시 주택에 임시 주거로 들어가신 분들이, 이재민이 100% 다 들어갔으면 수용됐습니까?

○행정안전부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지금 현재 이미 조립주택.....

○김형동 위원 그것을 확인을 해서 공유를 해 주십시오. 저희 안동 같은 99%라고 듣고 있고 확인이 되고 있는데 과연 다른 지역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농림부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김형동 위원 지금 농사철 거의 끝나 가는데 모내기까지 다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지금 모내기 현재 한 7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형동 위원 그것 확인을 하시고, 이제는 먼저 1대 농기계가 남아 있으면 빨리빨리 수급을 맞춰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김형동 위원 2차 피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아까 차규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나 이런 소관 부처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을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행안부 실장님!

○행정안전부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예.

○김형동 위원 아까 보면 전파·반파에 대한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예.

○김형동 위원 그런데 이것을 주소지 위주로 피해자를 산정하다 보니까, 이게 일일생활권이 있고 우리가 또 농촌에 2가구 주택 갖기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주소는 서울에 있는데 나는 귀농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예.

○김형동 위원 이런 분들에 대한 피해보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안동시나 경북도에다가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는 산주나 농축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주소지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피해보상이 안 되더라 이런 불만이 있습니다. 한번 주소지 위주가 합리적인지 아니면 하다못해 세금 내는 게 확실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주택까지만 하더라도 반파 이런 게 아니고 실제 전파됐다면 세입자 기준이 아니고 집주인도 보상을 받아야겠지만 그분이 거기서 경제적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예, 알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건의 사항입니다. 되셨습니까?

○행정안전부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예, 알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중기부차관님!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김형동 위원 아까 몇 분의 질의에 대해서 답은 주셨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직접적인 지원입니다, 금융지원.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계법이 통과됐고 이 부분이 특별법에 반영될 때도 정부가 적극적인 의견을 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알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최소한의 베이스를 말씀드리는데.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많은 분들이 매뉴얼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급한 질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말씀드리려 보면 돌이켜 보면 중구난방입니다. 헬기가 언제 해야 되는지, 밤에는 전쟁 안 일어납니까? 생각을 해 보면 지금 한국전쟁 이후에 최고의 재난이라고 하는데, 밤에는 전쟁 안 일어납니까? 야간이면 헬기가 내려요. 밤에는 올라가면 안 된다고 하고. 안전이 위주이기는 한데 어떤 면에서는 소방 매뉴얼이 거의 없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맡겨 두고 저같이 젊은 건장한 분들도 소개령을 내리니까 불이 집 앞에 왔는데 다 도망을 가고 앉았어요.

물은 불보다 강하다. 맞지요? 이 부분에 대한 매뉴얼이 전혀 없습니다. 아까 이달희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불 끄는 주체가 과연 누구냐? 이번에는 이게 특별히 산불이 아니고 또 많은 민주당 의원도 와 보셨습니다마는 불이 마을로 내려와서 마을을 덮치고 농공단지를 덮쳤습니다. 맞지요? 이런 부분은 개념을 새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많이 논의가 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경북 북부가 산림이 가장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산을 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산을 보면 무서워요. 좀 들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청은 식재나 관리 위주지, 이것을 이격해서 목초지를 조성하고 정말 사람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산청장님께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말 국가유산 국가보물 이런 것 케어하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방에서는 또 도 문화재, 기초단체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질의 마지막으로 임미애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기재부차관님, 아까 ‘집행 실적은 기재부가 매달 점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편성된 것으로 부족해서 예비비의 사용 요구가 들어온 적이 있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아직 예비비까지 이야기 들은 내용은 없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임미애 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충분하게 지원의 사각지대 없이 지원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그렇습니다. 5월 1일 날 추경안이 통과가 됐고 2일 날 복구계획이 확정기 됐기 때문에 지금 한 달 정도 지났거든요.

○임미애 위원 이 사각지대 확인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님!

○행정안전부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예.

○임미애 위원 혹시 NDMS에 접수가 불가능해서, 실제로 피해를 입었지만 접수조차 하고 있지 못한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가 있으십니까?

○행정안전부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저희들이 여태까지 보면 그런 사례는 지금 없고요. 일단 NDMS 등록 기간이 지나더라도 별도로 신고를 하면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요 NDMS에 입력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서 아예 신고조차 못 하고 있다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피해지역의 시군에다가 연락을 해 보시면 그 사례가 이미 수기로 접수가 되고 있으니까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구요.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도 피해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 시군에다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또 하나는요, 주민들이 답답해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지원을 받기는 받았어요. 그런데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데 이게 무슨 돈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시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면 이런 일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사회재난인지 자연재난인지에 따라서 사용되는 용어가 좀 다르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행정안전부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주택의 경우에도 동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세대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주거비로 지원하는 항목이 있고 복구비로 지원하는 항목이 있고, 이러다 보니 피해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행정의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데, 돈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이게 어떤 돈인지 모르고 그러면 내가 이후에 또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그리고 내가 못 받고 있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실 때 조금 더 친절해야 된다. 주민들이 2차·3차로, 이게 행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폭력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친절하게 이것을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확인하셨을 텐데요. 이미 지금 산불피해지역이 자립도가 전국에서 꼴찌인 지역입니다.

볼까요?

의성의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8.5%고요, 안동이 9.8%, 청송이 7.9, 영덕 7.7, 영양 6.1입니다. 이런 곳에 지금 국비가 예를 들면 임시 주택 건립비용이라고 그러면서 내려줍니다. 국비 50%로 내려줍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방비로 매칭해라 이러는데 지방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덕의 경우도 복구비 지급을 지금 국비 70%, 지방비 30% 매칭해서 지급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방비가 없어 가지고 국비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행안부에서 지금 이 상황을 확인하고 계시다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시군에서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는 긴급생활지원금의 경우도 지방정부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해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지역주민들이 갖는 박탈감은 굉장히 더 큼니다.

저는 시급하게 행안부에서 교부금을 2차로, 지난번에 내려가기는 했지만 2차로 다시 교부할 것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행정안전부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추가적인 재난 수요가 있으면 당연히 특교세도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추가적인 피해를 확인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재부 입장에서는 돈이 얼마큼 내려갔는데 얼마큼 집행되었는지 이것만 확인하실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아까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피해는 엄연히 발생했는데 주소지가 서울에 있다는 이유로 아니면 다른 시군에 있다는 이유로 전혀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도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 12시인데요, 보충질의를 계속 진행할까 싶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대부분 다 하시겠지요?

그러면 주질의 순서대로 보충질의를 하되 생략하실 분들은 자연스럽게 빠지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차규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시만……

○**위원장 김정호** 예, 차규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차규근 위원** 위원장님, 다름이 아니라 오전의 주질의 진행 상황을 보면 산림청장님에 대한 질의가 상당히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쪽 자리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고개를 이렇게 돌려 가지고 봐야 되는 상황이라 그사이에 시간도 낭비가 되고 목이 아픈 거라 혹시 농림축산부차관님 양해를 해 주시면 잠깐 자리 배치를 조금 이렇게……

○**위원장 김정호** 소방청장님하고 자리를 바꾸시면 어떨까요?

○**차규근 위원** 소방청장님하고 산림청장님께 집중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옆에 농림부차관님께서는 상대적으로 질문이 덜 가는 것……

○**위원장 김정호** 그래도 농림부차관님 너무 홀대하시는 것 같아요. 저 빈 좌석은 괜찮지 않습니까?

○**국가유산청기획조정관 황권순** 잠시 화장실 가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순서가 조직 건제상으로 이래 하신 건데 차규근 위원님이 목이 아프다니까 좌석을 조금 돌리시면 혼자만 수고하시면, 그대로 하십시오.

○차규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그러면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5분 그대로 하겠습니다.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질의순서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대전 대덕구 박정현입니다.

앞선 질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상섭 산림청장님!

○산림청장 임상섭 예.

○박정현 위원 저는 고개가 아픈 게 아니라 보이지를 앓는데.

아까 ‘산림화재 왜 산림청이 전담해야 되냐’ 이렇게 여쭙봤더니 67년간 산불 대응했고 오랫동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습관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산림청장님, 영상 한번 보시지요.

(12시03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2시04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산림청장님!

○산림청장 임상섭 예.

○박정현 위원 잘 보셨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박정현 위원 소방관은 소방청 소속이니까 그렇다 치고, 전문가도 그렇고 산림청 소속으로 있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도 지금 산림청의 산림화재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림청장이 말하는 전문성은 뭐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산림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된 자료라든지 노하우라든지 또 말씀드리자면 모든……

○박정현 위원 노하우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모든 DB……

○박정현 위원 다음 영상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이 영상에서도 보면 지휘본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는 게 드러나고 있고요. 특히 전문역량도 없는 일반 공무원보고 산불 통제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번에 산청 산불에 투입되었던 창녕군 공무원이 사망하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사망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 산불과 관련해서는 지휘체계를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보니까 산림청에 조림의 문제도 있고 임도에 대한 문제도 여러 가지 제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산림청 산불진화인력이 저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지금 2024년 기준 총 1만 명이 넘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1만 명……

○박정현 위원 공중진화대가 103명, 산불재난특수진화대가 410명 그리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 9446명인데 이 진화대원은 60대 이상이 7071명으로 75%가 고령자입니다.

산림청의 산불진화인력의 95% 이상이 진화대원인데 60대 이상 비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번에 진화대원 중에 3명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박정현 위원 앞서 허성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산불이 날 때마다 산림청에서는 대책을 세우는데 실제로 지금 집행된 게 거의 없고요. 물론 인력과 관련해서…… 1분만 더 주시면 제가 더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마지막 질의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1분 더 넣어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고맙습니다.

인력과 관련해서는 지금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2027년까지 2500명까지 늘리겠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몇 년 사이에 한 명도 더 늘지 않지 않았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박정현 위원 결국 기재부가 예산을 안 준 것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인력을 확 늘린다는 것이,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방청의 소방인력을 보면 소방인력이 6만 7000여 명이고 의용소방대가 9만 2000여 명으로 어쨌든 총 16만 1000여 명의 인력이 갖춰져 있는 거거든요. 이 인력이 있는데 왜 또 다른 인력을 지금 예산도 사실 녹록지 않은데 투입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산림청의 산불진화 전문성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단 국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요, 인력의 문제도 있고 해서 산림화재도 화재이기 때문에 화재 전문기관인 소방청으로 지휘체계가 일원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청은 예방과 복구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역할의 조정에 대해서는 사회재난실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걸 위원 행안부 실장님!

○행정안전부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예.

○**안도결 위원** 아까 제가 복구계획 집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실시간으로 집행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부족한 게 생기고 하면, 아까 김윤상 차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2.4조의 예비비가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것은 빨리 조달해 가지고 지원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TF를 구성을 하시든지 하십시오. 그래서 이 복구계획 집행관리 TF를 구성을 해서 가지고 그것을 주기적으로 집행 점검해서 가지고 결과를 우리 특위를 비롯해서 국민께 보고드리는데 그런 시스템을 가동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행정안전부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도결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중기부차관님께 여쭙게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안도결 위원** 이번에 산불로 피해를 입은, 그래서 공장이 전소되거나 반소됐던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지금 대략 반과 이상이 한 892개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안도결 위원** 전체로 크게 중대한 피해를 입은 데가 한 43개 이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그렇습니다.

○**안도결 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생산공장이 완전히 전소가 되어 가지고 생산이 마비된 상태인데 그분들은 빨리 공장을 정상화시키려고 하시더라고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그렇습니다.

○**안도결 위원** 그러면 빨리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안도결 위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안도결 위원** 예를 들어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거기에서 신증설을 할 경우에는 투자보조금을 줘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그렇습니다.

○**안도결 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자기 귀책사유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유로 해 가지고 공장이 홀라당 타 버렸단 말이지요. 이 부분에 다시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이분들은 신설이나 마찬가지로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그렇습니다.

○**안도결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투자보조금을 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논리구성이 쉬워요. 어려울 것도 없어요. 다만 재해를 당했는데 이제까지는 무슨 금융지원만 했는데 이것을 투자로 넘어가느냐 보조로 넘어가느냐, 이것을 어렵게 생각해서 그런 거지 그게 아니고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쉽게 풀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사업을 만드시든지 어찌든지 해 가지고 여하튼 재해를 입은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기존의 제도의 한 유형으로 해 가지고 저는 이 사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돈도 크게 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통상 투자소요의 4~25%, 그것은 지금 융통성 있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까? 그래서 일부는 금융지원을 하고 일부는 투자를 섞어서 그분들이 부담 없이 하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빨리 지금 공장을 재가동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무슨 금융이다 아니다, 지원하면서 세월아 네월아 이것은 말이 안 돼요.

그분들은 공장이 늦어지면 기존의 판매망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6개월 뒤에 무슨 시행령 고치고 난 다음에 지원을 한다고 한들 이미 그것은 때가 늦은 거예요. 때를 놓치는 거니까 이것은 신속하게, 예비비도 있고 그러니까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가지고 이것은 당장에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지금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지원 기준단가를 만들고 바로……

○안도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 개정 떠나서 이미 이것은 기존에 사업들이 있고, 이번에 중대본의 의사결정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예비비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지금 예산은 사실은 그 목적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안도결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번에 추경에서도 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그것은 저희가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도결 위원 그래서 빨리 실태 파악을 해서 가지고 이것은 빨리 예산사업화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 예, 알겠습니다.

○안도결 위원 그리고 공공폐기물 처리의 복구비 이것 관련해 가지고 조금 여쭙볼게요.

지금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이게 또 많이 불타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공립 폐기물 시설을 다시 설치해야 되는데 복구비용 분담 가지고 또 논란이 있네요. 지금 국비 50%만 하겠다 이거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즉 기존의 그것 아니겠습니까? 기존의 시설을 복구할 때 50%를 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재해를 당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지금 못하겠다고 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누가 담당을 하십니까, 폐기물 처리 이것은? 공공폐기물 처리시설 복구비 지원.

○행정안전부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행안부도 일정 부분 관여하고 있고요. 어쨌든 현재 국비는 50%인 것으로 담당 국장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도결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50%인데 이것은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고, 특히 지금 8개 지역이 굉장히 지역소멸지역 아닙니까? 경북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아까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미애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재정자립도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 이것은 예비비가 아니라 행안부의 재난특교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적 재량 조치로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안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택 위원 재난실장님, 아까 제가 지난 산불의 진화와 대피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좀 말씀드렸고 사실 더 좀 심각하고 세게 말씀드릴까 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매뉴얼 이랄까 제도랄까 이런 것을 잘 정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예, 저희들 임시적으로 초고속 산불 대비 대피체계는 이미 했는데 나머지 마련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제가 한번 그 검토안을 또 보겠습니다. 얼마나 제대로 만들었는지 보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기재부2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이원택 위원 제가 이제는 좀 총론적인 얘기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재난이든 사회재난이든 재해가 발생했어요, 본인 귀책사유가 아닌데. 그렇잖아요? 재해가 발생했는데 피해가 예를 들면 100이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피해가 1조 원 난다 그러면 복구와 관련된 소요는 그 1.5배에서 2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연재난이든 사회재난이든 그 지원과 관련된 기준은 관련되는 각 부처에서 고시로 지원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단가보다 상향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의결로.....

○이원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겠는데 예를 들면 우리 국민들이 어떤 재난을 당했어요, 본인과는 무관하게. 피해가 발생했거든요. 100이 피해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주택은 국토부, 농기계 또 아까 폐기물 처리 또는 생계비 여러 가지가 부처별로 나눠져 있어요. 칸막이가 돼 있거든요. 국민들은 내가 얼마큼 피해를 당했고 얼마큼 국가로부터 내가 생존하고 다음에 또 뭔가를 하기 위해서 디디고 일어설지에 대한 것이 정보 접근이 잘 안 됩니다.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차관님, 10%? 20%?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그것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원택 위원 이렇게 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총금액이 예를 들면 피해율 대비 어느 정도 됩니까?

농식품부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이원택 위원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피해 규모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저희는 복구비의 경우에는 100%라고 잡고 있고요. 또 보험 가입한 분들은 보험 가입한 비율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이원택 위원** 복구비도 잘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비야 그렇지만 대파 때도 예를 든다면 실지원단가가 낮잖아요. 단가가 낮은 상황에서 100% 줬 봤자 그거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 단가를 이번에 올린 겁니다.

○**이원택 위원** 저는 적어도 정부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계속 부처별로 있으면서 각각의 어떤 피해 지원액이 이렇게 칸막이로 돼 있고 국민들 잘 몰라요. 피해 당사자들 잘 모릅니다. 누가 좀 알려 달라고 해도 몰라요. 그런데 본인은 내가 총 피해액이 얼마다를 알거든요. 내 주택의, 내 농기계의, 내 농작물의 피해액이 얼마다 이걸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원되는지를 모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적어도,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생존과 그다음에 차년도에 살아갈 것을, 어떤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정부의 총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게 기재부가 해야 할 일 아닌가요,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아까 임미애 간사님도 비슷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떤 피해를 당했는데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지원액이 어떻게 된다는 피해받으신 주민들이 아시는 게 일단은 최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걸 넘어서서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피해를 봤는데 내가 보상이든 배상이든 지원을 얼마만큼 받아야 되느냐는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원택 위원** 저는 그것에 대한 정부 내 어떤 합의 또는 국가적 합의가 없거나 애매하기 때문에 이게 들쭉날쭉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최소한, 각 국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액이 다 있다고 봅니다. 어떤 분은 크고 어떤 분은, 중소기업은 또 중소기업대로 다 피해액이 있거든요. 이걸 어느 수준에서 지원할 건지가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각각 칸막이 쳐져 있는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자기 피해액의 얼마라든지, 저는 최소한 60%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험의 역할이 또 있겠지요. 보험은 그렇게 역할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기재부와 정부 방침이 지금 서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차관님, 서 있나요? 안 서 있지요? 지금 부처별로 각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판단하고 있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단가가 낮다는 지적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는 일단 100% 지원을 목표로 해서 지원단가는 계속 현실화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원택 위원** 그런데 적어도 기재부는 각 부처별로 예산 협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피해액의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는 알잖아요, 기재부는. 아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지원 기준과 단가 부분은 각 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고시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어

편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또 미래에 발생할 재해에 대해서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지원되는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리가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디테일한 건 3차 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이원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 가기 전에 잠시 의사진행 관련해서 안내말씀 올리겠습니다.

양당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보충질의 마치고 추가질의는 없는 걸로 하고, 대신에 보충질의하실 분이 다섯 분 남았는데 꼭 필요하다면 1분 정도 더 드려서 마저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기된 환경부나 산업부 부처 보고도 필요하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제도 개선소위 구성 건도 있고 그리고 오늘 충분하지 못한 질의 이런 것들을……

○김형동 위원 제가 주문한 것, 보고하고 확인해 달라고 한 것……

○위원장 김정호 예. 그리고 오늘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특히 예산집행 내역 등의 업무를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공유하고 보고하는 것까지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준비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이른 시간 내에 전체회의를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오늘은 처음 전체회의인데 전원이 다 출석해서 아주 보기는 좋습니다.

우리 산불재난특위에 기대하고 특히 8개 지역의 피해 주민들의 경우는 하루가 애가 탈 텐데 저희들이 좀 속도감 있게 이런 문제들을 다루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고, 소위가 법안심사를 빨리하도록 또 하시겠습니까만 전체회의도 한 번 더 열어서 계속 필요한 부분들을 보완해 가도록 그렇게 운영할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이달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달회 위원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원택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비슷한 질의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님!

○행정안전부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예.

○이달회 위원 재난이 나면 우리 국민들은 이게 사회재난인지 자연재난인지, 우선 내가 재난 입은 게 중요하지 그 분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예, 국민의 입장에서서는 그러실 겁니다.

○이달회 위원 국민들 입장에서서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지원체계는 다르게 되어 있지요?

○행정안전부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예, 그렇습니다.

○이달회 위원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어떤 차이가 있나요?

○행정안전부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일단은 예를 들어서 주택 피해금액 산정 경우에는 선정 기준이 아마 면적에 따라서 선정을 하는 것 같고요.

○이달회 위원 그러니까 사회재난은 아무래도 간접지원 항목이 조금 적고 자연재난을

우리가 천재지변이라 해서 조금 후하게 지원하는 그런 경우잖아요.

그런데 이번 산불 같은 경우에는 사회재난으로 분류되어 있지요?

○**행정안전부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예, 산불 자체가 사회재난으로 분류돼 있어요, 재난 법에도요.

○**이달희 위원** 그런데 이런 특위까지 열릴 정도면 그냥 사회재난이 아니고 자연재난이 겹쳐서 복합재난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실질적으로는 복합재난일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이달희 위원** 다들 아까 말씀들 하실 때 이 산불이 기후위기와 접목이 돼서 기존의 번지는 산불이 아니고 날아가는 괴물산불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원체계도, 사회재난의 간접지원 항목이 딱 정해져 있고 각 부서마다 지원하는 항목이 정해져 있지요. 그리고 자연재난의 항목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런 기후위기나 이런 부분에서 복합재난의 개념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실장님이 보고하신 부분에 보면 3페이지에 ‘2차 피해 우려 지역의 사면 및 토사유출 방지 조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후위기에서는 토사유출이 아니고요, 작년예 예천 별방리 같은 경우에 보면 토석입니다. 산꼭대기에 있는 큰 집채만 한 돌들이 굴러서 강가에 있는 마을을 1.7km 덮치는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작은 사회재난으로 시작하지만 이게 기후위기와 맞닥뜨리면 자연재해에 부합하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하시고 대책을 마련할 때 양분화 딱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 사회가 법대로 지침대로 규칙대로 이렇게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처 간의 협업도 잘 안 되고, 사실. 그런데 법도 이렇게 체계가 양분화되어 있으면 좀 넘나들면서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사회재난실장님 중심으로 해서 이런 복합재난에 대한 매뉴얼도 한 번쯤은 연구하고 해서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예, 알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이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성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무 위원** 행안부 사회재난실장님!

○**행정안전부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예.

○**허성무 위원** 재난 총괄 부서인데요. 사실은 2023년에 산림청이 발간한 백서는 그야말로 산림청 시각에서, 산림청 내 업무 수준에서 발간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의 이 산불은 그 단위를 훨씬 뛰어넘어서, 오늘 출석해 계신 부처만 해도 4개에 3개 청, 7개 부서가 출석해 있어요. 또 차 위원님 말씀대로 한 2개 부처가 더 나와야 될 사항이고 이렇다면 국가 전체 차원에서 이번 산불의 발생과 원인 또 경과 그리고 대처, 문제점, 미래 대안 이런 것까지 총괄하는 백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행안부 차원에서, 재난 총괄 부서 차원에서 범부처적으로 백서를 만들 생각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일단은 지금 이번 산불에 대한 대응 방안은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한 TF를 구성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저기에 행안부

도 지금 일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총괄 역할도 행안부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 적극 반영토록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아니, 직접 챙겨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사회재난실장 홍종완** 백서를요?

○**허성무 위원** 예. 국무총리실로 넘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행정안전부사회재난실장 홍종완** 그건 저희 하라고 그러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예, 행안부에서 직접 챙겨서 해 주시지요.

○**행정안전부사회재난실장 홍종완** 그 부분은 부처랑 상의를 해서요 저희가 주관기관이 아닌 입장에서 백서를 쓸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사항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예,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재부2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허성무 위원** 지금 이번 산불에 관한 특별법을 반대한다 이 논지를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논지가 세 가지예요. 그렇지요?

특별법을 만들게 되면 재난안전법이 형해화된다 일이 있을 때마다 특별법 만드는 것 반대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미 추경에서 많이 반영돼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그런 말씀도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이미 보험을 통해서 되고 있는 여러 개 있는데 보험 안 든 분들을 이렇게 해 줬을 때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세 가지 논리가 주인데요.

그걸 넘어서 지금 개별법에서나 정부에서 하고 있는 수많은 대책들로 이 피해를 다 포괄해 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또 아무리 우리가 촘촘하게 해도 곳곳에서 허점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예산의 문제를 넘어서, 아까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여러 제도끼리 상충돼서 안 되는 제도개선 부분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특별법이 필요한 건데 이 특위 자체가 그 특별법을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특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좀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제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릴 때 저희 우려사항을 전달했던 부분이고요. 이 특별법 제정안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만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규제개선이나 제도개선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들 저희가 소위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들, 특히 피해 입은 주민들이 이 특위에 대한 기대가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그 기대한 만큼 성과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관련 부처에서 좀 적극적인 전향적인 입장을 가져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산림청장님, 강원하고 경북에는 산불방지센터가 있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있습니다.

○**허성무 위원** 이번 산불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경북은 지금 조성 중이고 26년도에 완공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역할을 못 했고요. 강원 지역은 협업 기관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허성무 위원** 이번에 좀 적극적으로 인력 동원이라든지 뭐 충분한 역할이 있었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강원 지역은 강원동해안산불센터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성무 위원** 이 센터들이 실질적으로 산불 예방에서부터 실제 산불이 났을 때 실효성 있는 대처가 돼야 되는데 그런 큰 역량을 발휘 못 하면서 기구만 자꾸 설치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청장님 생각에 이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그만큼 큰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그 지역별 센터 만들게 된 것도 울진·삼척 동해안 산불 나면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것들인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1개 기관에서 산불을 담당하기가 현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부처들이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에서 만들어진 동해안……

○**허성무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남북과 부울경을 관리할 수 있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아직 없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래서 지금 지리산 권역에 이걸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저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관계부처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성무 위원** 기재부에서는 산림청에서 요구가 없기 때문에 지금 못 해 준다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행안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허성무 위원** 행안부에서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지자체 조례로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자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효율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허성무 위원** 예,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호** 허성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희 위원** PPT 2번 한번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차관님, PPT 내용을 한번 봐 주십시오. 보시면 집행률 관계를 지금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재난지원금 집행률이 38.3%, 물론 정부에서는 이게 7월까지의 전액 다 집행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게 있었고요. 금액 자체는 지난번 추경안을 통해서 약 한 5000억가량의 지방 매칭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집행률은 아직 상당히 저조하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벌써 산불 난 지 두 달가량 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행률이 이 정도에 멈춘다는 거는 현장에, 직접 국가의 어떤 보살핌이나 자치단체 활동들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만드는 과정들에서는 집행률이 중요한 것인데 이 집행률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 홍종완 실장님, 같은 내용상에 보면 재난구호성금입니다. 이 산불에 대해서 전 국민이 십시일반 다 마음을 같이 모은 그 돈들이 1944억가량 됩니다. 엄청난 금액이지요. 지난 올진 산불 때 한 800 정도가 걸렸었는데, 정말 3배 가까운 그런 금액이 걸렸는데요. 그런데 정작 이 돈 중에서 직접 이재민들한테 간 돈은 78억입니다. 나머지 1866억은 그 대로 어딘가에, 보통은 어떤 계좌에 있겠지요. 계좌에 잠겨져 있어요. 우리 국민들은 한 시바빠 이 돈들이 이재민들의 곳곳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기를 원하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됐냐는 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거 관계되고 말은 많겠지만, 현실은 전체 우리 국민들이 낸 구호성금의 단 4%만이 두 달이 지난 이 시점에 이재민들한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책임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물론 이 중에는 보면 구호협회는 행안부 소관이고 적십자사·공동모금회는 복지부 소관이고, 다 이유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확인하셔 가지고 더 이렇게,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예,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래요. 하여튼 늦었지만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산림청장님!

○산림청장 임상섭 예.

○이만희 위원 산불 거버넌스,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성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산림청 소방청 강원도 많은 단체들이 같이 대응한다는 점에서. 왜 그러나 하면 지난해 강원도의 산불 건수가 58% 감소가 됐고 피해면적도 92%가 감소가 됐고요. 대형산불 이후로는 지금까지 한 건도 더 대형산불이 없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그래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한번 저는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셔 가지고 필요하면 경북에도 하시고 경남·부울경 쪽에도 하고 충청도에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필요하다 생각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이만희 위원 차관님, 조금 전에 위원들 질의를 통해 가지고, 누가 말씀하셨지요? 임미애 위원님 말씀하셨나요?

산불 발생한 지역의 열악한 자치단체 재정력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도적으로?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지방의 재정력 격차에 따라서 지원하는 거는 우리 내국세의 20%를 지원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에서 지원합니다.

○이만희 위원 보통교부세 거기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또 조정금 이런 것 등 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번에 이런 재난·재해 관련해서 증액교부금 제도를 부활할 생각 없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증액교부금 제도는 위원님 질문하시니까, 잘 아시다시피 2004년도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증액교부금을 없애는 대신에 지방교부세를 올

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액교부금을 또……

○이만희 위원 압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요. 그 히스토리나 역사적인 상황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안도걸 위원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변화되는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증액교부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논의에 좀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재정으로 보면 중앙정부 재정이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고요. 만약에 증액교부금이 논의가 된다고 그러면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하고 같이 전체, 지방에 내려가는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전반적인 큰 틀에서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이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규근 위원 산림청장님, 아까 임도에 관해서 질의하다가 시간 부족으로 끊겼는데요. 산림청 입장은 임도밀도가 외국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이 늘려야 된다는 게 산림청 입장이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맞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러면 외국과 비교할 때는 그 기준이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는 게 맞겠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뭐…… 맞습니다.

○차규근 위원 ‘뭐’가 아니라 당연히 맞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맞습니다.

○차규근 위원 청장님, 그런데 임도 기준에 대해서 외국과 우리나라를 다른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그런 말들이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환경부에서, 국립환경공단의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조에 규정된 그 임도에 관한 면적밀도만 카운트하고 있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차규근 위원 그런데 오스트리아는 어떻게 되냐니까 사유도로, 마을도로, 공공도로 다 해 가지고 임도밀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고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렇다면 오스트리아는 거리가 45인가 50이고 우리나라는 4.3이기 때문에 아주 적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말씀드리면 그거는 논란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굉장히 많이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임도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멈춰서다가 만에 뭐냐 하면 임산물을 수송이나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산림, 우리나라의 임도밀도가 높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국도 지방도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킨 산속에 난, 우리나라가 산림 국가이기 때문에 포함된 그 면적을 기준으로 포함시킨 겁니다.

○차규근 위원 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시간 부족으로. 미안합니다, 말 끊어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준을 이렇게 비교하려면 같은 기준에 따라서 산정된 데이터를 비교하는 게 맞기는 맞지 않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차규근 위원 그거는 부인하지 않으시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산림청에 해외 임도밀도 관련해서 그러면 다른 국가와, 그 나라의 제도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임도밀도를 산정하는지 문서를 주고받은 게 있는지 물어보니까 해당 내용이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청장님, 임도 관련해서 진짜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예결위 때 관련해서 청장님께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기억납니다.

○차규근 위원 찬반 논리 분분한 것 같은데 이 소모적인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지 않겠냐. 동의하셨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동의합니다.

○차규근 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동해안 산불 관련해 가지고는 임도나 이런 기준을 인근 도로까지 다 포함했을 때는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그런 논문이 있는 반면에 산림청에서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 밀양 산불의 경우에 임도가 산불진화에 도움이 됐다 그런 말씀도 써 있는 거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자료에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렇다면 차제에 청장님께서 동의한 것처럼 찬반양론 관련 전문가들 불러 가지고 공청회를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청장님 동의를 하셨지요. 그렇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규근 위원 입장 그대로시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차규근 위원 위원장님, 산불특위 차원에서 한번 이 부분을…… 정말 소모적인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에 산림청 주장이 맞다 그러면 과감하게 더 힘을 실어 줘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예산 축소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청장님, 산림마피아, 산림청 이권카르텔 이런 언론보도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고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 기재부차관님,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 민간이 자유롭게 참여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국가계약법상에는……

○차규근 위원 수의계약이 아니라.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차규근 위원 그런데 산림청 같은 경우에 보면 2008년도에 산림사업 실행체계 개선방안 대책에 따라 가지고 수의계약을 축소하겠다는, 그래서 2015년도인가 그때는 경쟁계약을 25% 올리겠다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2014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을 권고했어. 수의계약이 너무 높다, 그게 11년 전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청장님?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고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런데 이번 5월 달에 감사원 감사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산림청 수의계약 문제가 조금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90%가 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고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 수의계약 문제만이 아니라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특수법인의 카르텔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산림청 산하에 특수법인이 세워졌습니다. 특히 치산기술협회장의 경우에는 1대 회장을 제외한 2대부터 지금 현재까지 전직 산림청장과 산림청 차장이 번갈아 회장을 맡아 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고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 저도 공직생활 해 봤습니다, 청장님. 이런 경우에 현직 공무원들은 전직, 모셨던 그분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시간 더 주십시오.

청장님, 눈치를 안 보려야 안 볼 수가 없는 구조인데.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에 전직 산림청장들이 있고 퇴직 공무원들이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의 간부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쟁 없이 산림청 식구들끼리 자리와 예산을 나눠 갖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림 분야 발전이 더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산불이 크게 날 때마다 산림청이 비난 받거나 문책받거나 시달서 쓰는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산림, 산불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고 있는 것인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청장님, 이렇게 정권 관료, 협회 간의 유착이 고착되면 정책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그 기관에 대한 신뢰도 생길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차규근 위원 그러면 이 산림 카르텔, 산피아 지적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한 산림청의 구체적 계획을 이른 시일 내에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중에 임도 관련된 공청회 등은 우리 산불특위 주최·주관으로 양당 간사가 협의해서 전체 위원들이 함께 한번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순서인데요.

임종득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득 위원 산림청장님, 초대형산불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헬기가 제일 중요하다, 고정익 항공기도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임종득 위원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면 이번에 산불진화에 1180대의 헬기가 투입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연 투입된 횟수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누적되는 거지요.

○임종득 위원 그렇지요? 아마 이 보고를 받으면 ‘엄청난 헬기가 투입되어 가지고 잘했

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산불진화 현장에서 한 6일간 계속 있었거든요. 그때 청장님도 저하고 통화를 많이 하셨지만 가장 큰 문제가 헬기 보내 달라는 아우성이 계속 있었잖아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임종득 위원 그런데 실제로 헬기 운용되기가 되게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거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임종득 위원 왜 그랬나를 보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야간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문제 그다음에 연무 때문에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든가 안개가 끼어도 안 되고. 그렇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임종득 위원 여러 가지 제한사항들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초대형산불에 대해서 항공기 운용이 필요한데 이 제한사항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부분이 이번에 제대로 검토되어 가지고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결국은 대형화 문제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대형 헬기, 중형 헬기, 소형 헬기로 나뉘져 있잖아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임종득 위원 대부분 소형 헬기가 많더라고요,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렇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지자체는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대형과 중형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용량의 차이가?

○산림청장 임상섭 대형 헬기는 5000ℓ 이상 5t 이상을 저희가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우리나라 중형 헬기는 한 3000ℓ인데 대형 헬기 같은 경우에는 5000ℓ, 7000ℓ 그리고 1만ℓ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배 내지 5배 정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 차이가 워낙 나기 때문에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형화 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부분이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천후로 활용할 수 있는 헬기가 필요하다. 지금은 카모프 헬기가 산림청의 주무 소방 헬기로 사용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제가 지적했었고요.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내산 수리온 헬기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야간에 운용할 수 있는 헬기가 꼭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불을 다 잡아 놓으면 밤사이에 다시 재발화하거나 확산이 돼 가지고 또 타오릅니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조치하고 있는 게 있나요?

○산림청장 임상섭 야간 진화하는 것들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말씀하신 야간에 진화할 수 있는 헬기 도입하는 것, 두 번째는 고정익 항공기를 이용해서 진화하는 방법, 세 번째는 밤에는 비교적 바람이 약하기 때문에 지상진화인력이 투입돼 가지고 진화하는 이 세 가지로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것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가유산청장님, 아까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국가유산 현장마다 방염포를 비축해서 위기 시에 신속하게 투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산의 범위 자체를 어떻게 지금 구분하고 대비하고 있는 거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저희들이 일단 국가유산 중심은 국보·보물, 국가유산 지정 문화유산이 중심이고요.

○임종득 위원 그러면 지금 국보와 보물에 대해서는 다 하고 있나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다만 지자체에서, 지방 유산의 경우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매뉴얼에 따라서 좀 더 공급도 필요하고 해서 앞으로 그것을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면 지금 방염포를 비축한다는 뜻인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렇지요.

○임종득 위원 어디에 비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것은 생산과 이것을 좀 맞춰야 되는데 그동안 방염포의 기준과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서 그것을 갖다가 확대 보급하려면 미리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임종득 위원 지금 예산도 확보가 안 됐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산은 저희가 가용 예산을 지난번에 7000만 원을 확보해서 우선 긴급 투입을 했고 필요할 경우는 더더욱 추가할 예정입니다.

○임종득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국가의 보물, 국보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방염포의 대비 상태 자체를 해당 보물을 관리하는 그쪽에서는 몰라요. 그리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대비체계를 좀 갖춰 달라는 말씀입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지자체하고 돌봄센터하고 같이 협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행안부 실장님, 지금 주민 대피체계 개선방안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안전부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예, 초고속 산불 대비.

○임종득 위원 이번에 보니까 나이 많으신 거동 불편한 분들을 조기에 대피를 시켜야 된다는 부분에 공감하면서도 또 빨리 집을 비우다 보니까 끝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이 불에 탔다 하는 불만들도 나오고 있어요.

○행정안전부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예,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이게 어디가 적절한 범위인지에 대한 매뉴얼이 검토돼야 된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소화기구들을 가지고 집에다가 이렇게 물을 뿌리고 해 가지고 집을 지켜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

○행정안전부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소방청이랑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다음에 헬기 조종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육군이나 공군 이쪽에는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하는데 소방청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터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없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소방청장님, 없지요?

○소방청장 허석곤 예.

○산림청장 임상섭 산림청에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산림청은 있고,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전천후로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세요.

○소방청장 허석곤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임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현황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5항까지 4건의 특별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달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어제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특별법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여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에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서천호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출석해 주신 기관장님, 관계 직원 여러분, 위원회 사무처 직원을 비롯한 의원실 보좌관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명단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법안심사(7인)	박정현 이원택 ◎임미애 허성무	더불어민주당(4)
	김형동 서천호 이달희	국민의힘(3)

◎표시는 소위원장임

○출석 위원(13인)

김정호 김형동 박정현 서천호 신성범 안도걸 이달희 이만희 이원택 임미애
임종득 차규근 허성무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전문위원 임재금
전문위원 나아정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윤상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천재호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안전정책국장 김주이
재난복구지원국장 조덕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범수
농촌정책국장 박성우
정책기획관 김정주
농식품혁신정책관 김정욱
농업정책관 윤원섭
축산정책관 안용덕
유통소비정책관 홍인기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성섭
중소기업정책실장 노용석
소상공인정책실장 최원영
정책기획관 김우중
글로벌성장정책관 이순배
소상공인정책관 이대건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 황영호
소방청
청장 허석곤
기획조정관 오승훈
화재예방국장 홍영근
장비기술국장 윤상기
국가유산청
청장 최응천
기획조정관 황권순
유산정책국장 이은복

산림청

청장 임상섭

기획조정관 이종수

산림산업정책국장 박은식

산림복지국장 송준호

산림보호국장 최영태

국제산림협력관 남송희

산림재난통제관 이용권

【보고사항】

○의안 회부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2025. 4. 7.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5)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

(2025. 4. 15. 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5)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4. 18.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7)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2025. 4. 21.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98)

이상 4건 5월 13일 회부됨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2025. 6. 5.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0)

6월 9일 회부됨